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1.12.27(월) ~ 2021.12.31(금)

제공일시 2022 01 0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1.12.27(월) ~ 2021.12.31(금)

제공일시 2022 01 0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EU, 원자력·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韓도 관련 논의 전망

- EU 집행위원회가 31일(현지시간) 회원국에게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초안을 전달
- 집행위는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새 원전은 2045년 전 건축허가를 받아야 녹색으로 분류. **천연가스 발전은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sub>2</sub>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고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해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 EU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 에너지원을 녹색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세움. 천연가스와 원전은 배출 온실가스가 산업 평균 미만이어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안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 EU는 이달 중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 사업을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는 규정을 확정할 전망

(한국경제, 2021.12) 김소현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2904>

###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첫 공개... '원전 제외·LNG 포함' 논란

- **환경부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는 녹색 투자를 유도하면서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자 나온 녹색 경제활동 원칙과 기준. 6대 환경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을 제시.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구분되며, 총 69개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
- **녹색 부문에는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녹색 경제활동이 담김**.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활동을 포함. **전환 부문은 진정한 녹색 경제활동이라 볼 수 없지만,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5개 활동이 들어감**.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LNG 발전**이 있음. 또 LNG로 생산한 그레이수소보다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
- 이번 지침서는 금융권과 산업계에서 녹색사업을 확인하고,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녹색금융 활동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환경부는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해 지침서를 보완하고, 2023년부터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

(뉴스시스, 2021.12.30) 정성원 기자  
[https://newsis.com/view/?id=NS0001L221\\_000175711&cid=1031&pid=10000](https://newsis.com/view/?id=NS0001L221_000175711&cid=1031&pid=10000)

### 3. 고뇌에 빠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폰서 기업들, 인권이나 돈이나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텔 등 올림픽 스폰서들은 **중국 신장 인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 올림픽 마케팅 활동에서 개최도시 베이징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예 올림픽을 테마로 하는 광고를 내지 않겠다**는 기업도 속출. 올림픽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PR회사에 조언을 구하는 기업도 있음. 코카콜라, 도요타 등 올림픽 주요 후원사들은 미국 정치권과 인권단체로부터 올림픽 스폰서에서 철수하고 중국 인권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 받기도 함. 반면 인텔은 공급망에서 신장 위구르를 빼려는 움직임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함

(이투데이, 2022.1.1) 배준호 기자  
<https://imtoday.co.kr/news.php?idno=2022144>

### 1. 일본,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

- **일본 정부는 인권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첨단 감시기술에 대해 수출규제를 검토**하기로 함. 이는 바이든 미정부가 주장한 감시기술의 수출 관리를 위한 다국간 체제의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에서 의심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에 이런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일본은 안면인증 등의 감시 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 많음. 현재 일본은 반도체 기판 등은 수출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안면인증기술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외환법에 근거한 정령을 개정해야 함.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과의 협의에서, 어떤 제품과 기술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지 검증할 계획**

(스페셜타임스, 2021.12.29) 정시환 기자  
<http://www.sptimes.co.kr/news/articleView.asp?newsid=202112290001>

### 2. 아마존 AI 비서 알렉사, 치명적 인명사고 났 뻔 했다

- 미국 아마존이 개발해 널리 상용화 돼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알렉사'가 10살 소녀에게 일명 '페니 챌린지'를 제안, 자칫 소녀가 감전 사고를 당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으나**, 인근에 있던 어머니가 신속히 제지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 당시 소녀가 챌린지를 할 만한 소재를 물었고, 이에 알렉사는 웹에서 챌린지라는 단어로 검색, 페니 챌린지를 찾아 그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추정. 페니 챌린지는 최근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SNS에서 큰 인기를 얻은 놀이. 콘센트에 충전기 단자를 반쯤 꽂고, 드러난 단자 금속 부분에 동전(페니)을 갖다 대는 것. 앞서 페니 챌린지가 유행하자 영국과 미국 등의 소방당국은 놀이라고 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인 페니 챌린지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을 내기도 함. **이에 아마존 대변인은 해당 오류를 즉시 수정했다고 발표**

(매일신문, 2021.12.29) 황희진 기자  
<http://news.mknet.com/page/view/2021122911230312>

### 3. 프랑스, 과일·채소 플라스틱 포장 금지 시행

-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선 오이, 레몬, 오렌지 등 30개 품목 과일과 채소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 잘라서 판매하거나 가공을 거친 품목만 이번 금지 목록에서 제외.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야채 품목 가운데 약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돼 판매. 정부 당국은 이번 금지안으로 매년 10억 개 이상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22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병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 운영기관은 식수대를 설치해야 함. 또, 출판물들은 플라스틱 포장을 해선 안 되며 패스트푸드 식당들은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공할 수 없음**
- 최근 글래스고 COP26 회의 이후, 프랑스 외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금지안을 발표. 지난달 초, 스페인은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할 것이며 그전까지 기업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BBC News, 2022.1.1)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837613>

### 1. 올해 4조원 닷 올리는 '정책형 뉴딜펀드'

- 금융위원회는 '정책형 뉴딜펀드' 올해 운영계획을 2일 공개. 올해 뉴딜펀드 예산은 지난해 5100억원에 비해 900억원 증액. 올해 정부 예산 6000억원과 정책자금(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 8000억원), 민간자금 2조 6000억원 등으로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
- 또 주관기관으로 산은·성장금융 이외 민간 운용사를 추가 선정해 뉴딜펀드를 나눠 운영. **민간 운용사를 올해 1분기(3월) 중 선정해 뉴딜펀드(자펀드) 4조원 중 20%인 8000억원(잠점)을 주관할 예정.** 아울러 탄소중립·지역뉴딜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 탄소중립에 투자하는 운용사 우선선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뉴딜은 올해 대비 2배 이상 펀드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뉴딜펀드의 결성시한도 기존 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하고 펀드 조기결과와 투자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
- **성과관리는 대폭 강화.** 주관기관에 대해 신용평가사·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평가를 추진.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펀드 성과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주관기관뿐 아니라 운용사 평가관리도 진행할 계획

(머니투데이, 2022.1.2) 정혜윤 기자  
<https://www.moneytoday.co.kr/news.php?no=2022112109648782&cat=01&date=20220102>

### 2. 30일부터 도시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해야

-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12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힘. 먼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함
-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 아울러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 계획 수립 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

(아주경제, 2021.12.29) 윤주혜 기자  
<https://www.ajunews.com/news/202112291500304>

### 3. 과기정통부, 올해 연구·개발에 6조4227억원 투입...탄소중립·차세대 기술 확보 주력

- 과기정통부는 2일 올해 연구·개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1.6% 늘어난 6조4227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힘
- **올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예산에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150억원, 탄소 포집 및 활용(CCU) 기술 개발에 90억원, 미래 수소 원천기술 개발에 76억원이 투입
-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 대기업이 멘토링과 판로 지원에 나서면 정부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에 80억원을 지원할 예정

(경향신문, 2022.1.2) 이정호 기자  
<https://www.kyungnews.com/article/2022010211959>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1.12.27(월) ~ 2021.12.31(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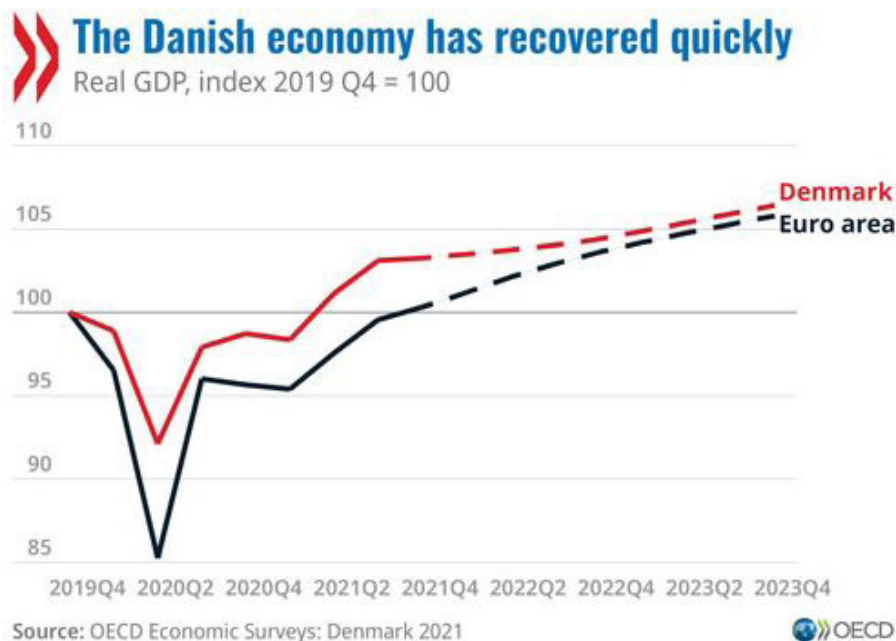
제공일시 2022 01 0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 덴마크,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위해 '기후'에 중점

- OECD는 코로나19 여파 가운데 덴마크가 회원국 중 빠른 경제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힘. 2019년 4분기의 실질 GDP(국내총생산)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 유럽연합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020년 2분기 85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4분기 원래 수준으로 회복해 2023년 4분기까지 105로 회복할 전망. 반면 덴마크는 2020년 2분기 93 수준으로 떨어져 2021년 4분기 103까지 반등해 2023년 4분기에는 106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즉,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덴마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덜했지만 회복력도 강했다는 것. OECD 경제 조사분석에서 덴마크의 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는 2.4%, 2023년에는 1.7%로 회복되어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OECD, 2021.12.16)  
<http://www.oecd.org/newsroom/denmark-focus-on-climate-policy-and-labour-market-reforms-for-a-strong-and-sustainable-recovery.htm>  
(Ecoscope, 2021.12.16) Andrew Barker 외  
<https://www.ecoscope.blog/2021/12/16/forward-vel-ero-entirens-on-denmark/>  
(뉴스핌권, 2022.1.4) 이후림 기자  
<https://www.newspe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  
(산업일보, 2021.8.21) 도수화 기자  
<http://www.kidco.kr/news/22372>

[유럽국가 대비 덴마크의 경제 회복 속도]



- 이 같은 덴마크의 경제 회복력의 원인으로 OECD는 경제 회복에 집중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기후에 집중한 청정 경제 전환에 주목. 1990년 이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발표했던 덴마크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70% 줄이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2020년 12월에는 북해에서의 석유 및 가스 탐사·추출 및 생산을 2050년까지 중단하겠다고도 선언. 게다가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의 60%가 환경 목표와 연관. OECD에 따르면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높은 비율

- 특히, **풍력 발전이 수출 산업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특히 덴마크는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 앞서 있음. KOTRA의 ‘2021년 덴마크 해상풍력발전 산업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지난해 7월 기준 14개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운영 중이며, 총 누적발전 용량은 1천699MW(메가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MW 규모의 생산용량은 덴마크 내 약 1000가구가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 풍력발전 규모가 상당한 가운데, 2019년 기준으로 덴마크 풍력산업 종사자는 3만3000여명에 이르며, 풍력 에너지 기술 및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비해 20% 증가한 89억 유로(12조 330억원)에 달함. 이는 덴마크 전체 수출의 7%,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를 차지. 또한 덴마크는 베스타스(Vestas), 지멘스가메사(Seimens Gamesa), 오스테드(Orsted), COP, NKT 등 **풍력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영국, 대만 등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참여하거나 기술/제품 판매 등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
- 게다가, 덴마크는 청정 경제 전환으로 발생한 고탄소 배출 산업군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녹색 분야에서 포용하여 상쇄하고자 노력 중. 이를 통해 일자리 손실율이 감소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일례로 해상 석유 및 가스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들이 해상 풍력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재교육시킴
- **그럼에도 OECD는 덴마크 정부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녹색 기술과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 더불어 세계적인 낙농업 국가인 만큼 농업 부분의 녹색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봄. 또한, 덴마크 정부는 친환경 차량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소 확충 등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아 국민 85%가 전기차로 출퇴근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운송이 증가해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 따라서 OECD는 친환경 운송을 증대시키기 위해 외곽 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의 폭넓은 정책을 마련하여 전기차 전환을 보다 빠르게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 뿐만 아니라, **덴마크는 고탄소 배출 산업군의 근로자를 녹색 산업군으로 재배치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청정 기술 교육을 노동 시장에 제공하고 구직을 지원함으로써 청정 경제 전환 아래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
- 한편, 덴마크 정부는 2022년 운송 분야의 청정 전환에 보다 속도를 낼 전망.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는 1일(현지시간) 신년사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선 항공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프레데릭센 총리는 “쉽지는 않겠지만 관련 기업과 연구원들이 해결책을 찾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30년까지 덴마크 국내선 항공편이 완전히 친환경적인 비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덴마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친환경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함. 더불어 덴마크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해율이 높은 비행기에 공항 요금 인상을 도입할 방침. 더 나아가 2045년을 목표로 국제선 항공편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할 계획